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4~'28년간 총 1,997.5억원(국비 1305.0억원 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 23일(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총사업비 1,997.5억원(국비 총 1,305.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로봇 업계 대부분은 중소기업(99%)으로 로봇을 개발하여도 수요처의 실증 결과 요구 및 실증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실증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실증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5년간('24~'28년) 로봇 실증 평가 기반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하여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도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기업은 로봇의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상환경에서 사전적으로 포착·개선함으로써 로봇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테스트필드 부지조성 등에 착수하며, 이르면 '25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시작으로 '28년까지 테스트필드가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지원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글로벌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정부는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박형태 (044-203-4318)

참 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산업구조 혁신,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로봇 업계 대부분은 중소기업(99%)으로 로봇을 개발하여도 수요처의 실증 결과 요구, 실증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 직면
- (사업목표) 글로벌 로봇시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규모/기간) 1,997.5억원(국고 1,305.0억원) / ‘24년 ~ ‘28년(5년)
- (조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65번지(면적 166,973㎡)
- (주요내용) 가상환경, 실환경 기반 로봇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 실증평가 기술개발,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 (안)

